

국내 동정

원광대 방사선산업기술지역혁신센터, 전북 방사선 혁신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원광대 차세대 방사선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센터장 이충훈)는 최근 전북지역 방사선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갔다고 4월 25일(화) 밝혔다.

센터는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10년간 정부와 전북도, 민자 등 총사업비 169억 원을 지원받아 방사선산업 연구·개발(R&D) 및 기반구축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전북도와 익산시, 원광대를 비롯해 방사선관련 부품생산업체인 태준제약·ISP·카사테크·삼화양행·프리텍 총 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한다. 또 진단용 X-레이선 장비개발 생산업체인 리스팀 등 33개 업체가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

특히 센터는 익산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소장 윤권

하)와 함께 전북지역 방사선 산업기술의 혁신 허브 역할수행을 목표로 △방사선산업 관련 장비구축 및 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생체용 방사선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응용기술 및 장비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방사선 산업 육성으로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액과 1,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20개의 기업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용출처 : 2006. 4. 25 전자신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원자로 반경 800m로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협의해 온 대전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와 논의 결과, 연구소 측이 제시한 원자로를 중심으로 800m까지를 포함시키는 안을 확정해 과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4월 3일(월) 밝혔다.

그동안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2004년 이후 잇따른 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을 들어 대덕테크노밸리와 송강지역 등 민간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피해가 없도록 사업자가 과기부의 승인을 얻어 마련해야할 대응계획 및 조치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돼 이번에 전문가와 공무원, 지방의회,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가하는 시민 협의회를 거쳐 재설정됐다.

-내용출처 : 2006. 4. 4 디지털타임스